

중도위, J프로젝트 심의 왜 보류했나

# “도시계획 공간 불명확” 보완 요구

## 해당부처 미온적... 이달 말 통과여부 촉각 전남도 “일부 사업지구 제외 감수하겠다”

J프로젝트가 4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영암과 해남 일대를 동아시아 최대규모의 복합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려는 전남도의 야심 찬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를 둘러싼 농림수산식품부와 갈등을 최대 장애물로 여겨왔으나,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공간의 범위’라는 뜻밖의 복병이 등장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 심의 보류했나=13명의 중도위원 가운데 이번 심의에 참가한 10명의 위원들은 전남도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삼호·구성지구의 도시계획 공간이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즉 삼호지구 919만6천㎡(278만 평)와 구성지구 2천186만7천㎡(661만 평) 등 939만 평을 나머지 4개 사업지구와는 별개로 보고 도시계획을 심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J프로젝트의 전체 사업지구인 87.9㎢(2천660만 평) 모두를 도시계획 대상지구로 보고 심의해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애기다. 중도위는 공간의 범위에 따라 광역교통 체계나 인구 규모, 주택 수요, 녹지공간 확보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될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결국, 이번 중도위는 J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타당성,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문제만을 다루다 끝이 난 셈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상당수 중도위원들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어서 J프로젝트를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했다.

◇중도위 심의 전망=이달 말쯤 중도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심의 통과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전남도는 전체 6개의 사업지구 가운데 사업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삼포와 부동지구를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이 경우 사업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 제외될

■J프로젝트 추진일지

- 2003 6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구상 시작
- 2004 7.29 노무현 대통령 정부지원 의지 천명
- 2004 12.9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 2005 8.2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
- 2007 4~9 5개지구 전담법인 설립
- 2007 11.27 초송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
- 2007 12.26 삼호·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
- 2007 1.2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삼호·구성지구)

조송과 송촌지구는 장기적으로 중도위 심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전남도의 안이 나오더라도 해당·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문광부가 동의해 출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부처는 최근 들어 ‘J프로젝트 대상지구 가운데

시범지구 1천만 평만 개발할 것’을 주문해왔다. 그런 만큼, 삼포와 부동지구를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들 지역이 사실상 J프로젝트 사업대상 부지로 확정되도록 하려 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전남도 반응과 대책=전남도는 ‘보안심’이라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J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다, 지난 2일 J프로젝트 대상지역을 실사한 중도위원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심의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는 ‘일단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당초 삼호·구성지구와 함께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던 초송지구를 심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여줬다. 초송지구의 간척지를 소유한 농림수산식품부가 간척지 양도양수에 난색을 표시, 중도위 심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뜻밖의 변수가 돌출됨으로써 전남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전남도는 일단 이달 말까지 ‘도시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대상지는 제외하는 방안도 감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5 하계U대회 광주 유치 범시민지원추진협의회’가 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U대회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U대회 광주유치 범시민지원협 창립 각계 60명 참여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지원추진협의회가 4일 광주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범시민지원추진협의회장에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 총장(인터뷰 16면), 실무지원단장에 김상진 전 참

여자체21 정보센터 이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협의회는 지역 체육계와 경제, 문화, 종교, 언론계 인사 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범시민지원추진협의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10~15명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이 단

체는 광주시 5개구 15만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지원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범시민지원단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 또 국제대학스포츠클럽(FISU)의 현지실사에 대비해 유치 불 조성에 나서며 개최지가 결정되는 5월23일까지 유치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 51년만의 개정 작업...민법 어떻게 바뀌나

4일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으로 성년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꾸는 등의 민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1958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된다.

### 노인·장애인도 후견인 선임 가능 법인·근저당·보증인 규정 정비

◇성년 나이 만 20→19세 = 우선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민법이 바뀐다. 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만 18세로 낮출 경우 고교 3학년 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세가 기준이 됐다. 청소년의 조속 현상을 반영, 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상당수 주 등은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19세, 스위스와 일본, 대만 등이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성년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성년 나이가 바뀌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애인도 후견제 도입 =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받은 이들에겐만 후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행위 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후견인의 역할도 재산 관리 등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인 및 근저당권 규정 정비=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도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완화해 설립이 간편해진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은 단체 결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을 폐지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일반적인 담보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저당의 경우 현행 민법에 1개 조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이 상세하게 정비된다. 개정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명시된 보증인 보호 규정도 민법에 편입해 기존의 민법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등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권리자가 지나치게 쉽게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개정위원회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 작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연하스

### 정부 “이주민 생계 지원 대상 너무 광범위” 여수박람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난항

여수세계박람회 시설과 관련 이주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정부 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여수세계박람회 특위 법안소위에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이주민 대상을 직접시설 지역에 지원시설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지원시설의 경우 순천·광양 등 주변 지역의 상업적 목적 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원 범위의 경우 직업전환 교육 등은 가능하나 소득창출사업 지원까지 포함될 경우 이를 위한 준비나 주민 간 갈등으로 1년 이상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 자칫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추승용 의원은 “개정 조항은 행정 중심도시 개발법이나 혁신도시 개발법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업지연 문제를 이유로 법의 형평성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주민들도 다른 법에 이미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예 보상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일단 타 법과의 형평성을 맞춰 특별법을 개정하고 향후 주민과의 협의의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법안소위는 오는 12일 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 대학도 전략이다

### 자기개발 전략파트너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대학의 역할 변화

2. 대학의 경쟁력 강화

3. 대학의 사회적 책임

4. 대학의 미래 전략

## 2009학년도 신·편입생 추가모집

1. 모집 대상

2. 모집 일정

3. 지원 방법

4. 입학 상담

1677-2853 (평일 9시~18시)

www.kbc.ac.kr

02973-5100